

신문 모니터

- 문서번호 부산총감연2020-0318-신문02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 제 목 부산일보는 통합당 당내 불만에 집중 국제신문은 거대 양당 대결에 골몰
- 날 짜 2020년 3월 18일(수)

부산일보는 통합당 당내 불만에 집중 국제신문은 거대 양당 대결에 골몰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는 부산지역 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과 지상파방송 메인뉴스(KBS부산, 부산MBC, KNN 저녁종합뉴스)를 주요 대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3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5일 간 진행한 신문모니터 2차 보고서이다.

분석기간	3월9일(월)부터 3월13일(금)까지
분석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분석기사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선거”, “총선”, “지역구”, “지지율”, “유세”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사 모두

△ <표1> 부산 지역 일간지 4·15 총선 관련 보도 양적분석 개요

부산 지역 신문 선거 보도 증가, 보도 비중은 18.4%

3월 둘째 주 신문의 총 보도 수는 514건이었고, 이 중 95건이 선거 관련 보도였다. 총 보도 수 대비 선거 보도의 비중은 18.4%였다. 이는 3월 첫째 주 지역 신문의 선거 보도가 53건, 선거 보도 비중은 10.5%였던 데 비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신문사 별로 살펴보면 3월 1주에 이어 3월 2주에도 국제신문의 선거 보도 건수와 선거 보도 비중이 부산일보에 비해 더 높았다. 국제신문의 선거보도 비중은 20.8%로 부산일보에 비해 4.8% 높았으며 13건 더 많았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 도 량	선거 보도 수	54	41	95
	총 보도 수	259	255	514
	총 보도수 대비 비중	20.8%	16.0%	18.4%
	지난주 대비 비중 변화	+ 9.9%	+ 6.0%	+ 7.9%
보 도 유 형	스트레이트	53	37	90
		98.1%	88.0%	94.7%
	기획, 연재, 특집	0	0	0
		0.0%	0.0%	0.0%
	인터뷰	0	0	0
		0.0%	0.0%	0.0%
	사설	1	2	3
		1.8%	4.8%	3.1%
	칼럼	0	1	1
		0.0%	2.4%	1.0%
	사진	0	1	1
		0.0%	2.4%	1.0%
사실확인보도	0	0	0	
	0.0%	0.0%	0.0%	
기타	0	0	0	
	0.0%	0.0%	0.0%	

△ <표2>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건수와 비중

3월 1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보도유형은 사설이다. 국제신문 1건, 부산일보 2건으로 총 3건의 사설이 있었고 선거 보도 중 3.1%를 차지했다. 두 신문은 각각 한건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했다. 그 근거로 부산일보는 3월 11일 자 <위성정당 반대, 재난기본 소득 도입, 지역 민심 귀 기울여야>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장을 제시했는데, 해당 사설은 “특히 이런 주장은 4·15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나온 것이란 점에서 지역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3월 12일 자 <당원투표 가는 민주 비례정당 여론 역풍 없겠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노무현 정신’과 맞지 않다 비판하며 “꼼수에 맞선 꼼수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꼼수엔 꼼수라면서…미래통합당 꼼수는 비판 않는 지역 신문

지역신문은 사설에서 지역 민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등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했다. 이런 흐름은 선거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2주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 관련 기사는 총 6 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비례

연합정당 참여여부에 3 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에 3 건이 할애됐다.

부산일보 <‘꼼수 vs 꼼수’ 대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종결자는?>(부산일보, 3/10, 8면)은 헤드라인에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함께 사용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과 기사 내용 모두 더불어민주당만 언급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로 분류했다. 해당 기사는 마지막 문단에서 ‘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결함은 미래한국당 창당 때부터 드러났다고 봐야한다. 또 두 거대 정당이 어떠한 꼼수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도입한’이라는 수식만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결함이 드러났다 지적하는 건 근거가 불충분하다.

‘꼼수 vs 꼼수’ 대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종결자는?

민주당, 진보진영 연합정당 참여 전 당원 투표로 곧 결정키로 '비례' 없던 출신 승리 난망 판단

정의·민생 등 군소정당 '냉담' 파괴력 미래한국당 못 미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감자'인 진보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지만 '꼼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의 결단 대신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내 여론을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인 데다, 이들 상당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연합정당 참여에 비판적인 실패론 최고위원은 9일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했던 행태에 대해 위성 정당이다, 기차 정장이 아니다, 아주 비난을 받아왔지 않았느냐"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연합정당 참여가 '필요'라는 인식이 짙다.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 의견 자체가 연합정당 참여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중 플레어' 아니냐는 시각까지 내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이는 민주당이 자체 분석 등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대 총선 비례 정당 관련 상황 전망-민주당 대응 전략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례 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비례 의석은 6~7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연합정당 참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용 선거연합 움직임 외에도 범여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해림(무소속)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과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우회총·최배근 교수가 결성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등도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민주당과 교감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여간의 승리를 위해 연합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결성의 주축으로 인식되는 정의당은 현재까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민생당과 녹색당 등 다른 군소 정당들도 참여에 대해선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생당에서는 대안신당 계열인 천정배 의원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녹색당도 지난 4일 비례연합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분위기라면 연합정당의 파고따가 미래한국당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최대 선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까지 연합비례정당으로 공조가 되고 함께한다면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의 참여를 재차 독려했다. 이처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기차 정장' '꼼수 정당' '나쁜 정치'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던 민주당이 사실상 연합정당 참여를 본격화하면서 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친서' 닷새 만에 北 단거리 발사체

북한이 9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북한의 '강압' 양면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6분 북한 함양도 선역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km, 고도 약 50km로 탐지된 한·미 정보 당국이 세부 제원을 잠정 분석 중이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냉전과 온전'을 오가는 전략적인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지난 2일 발사 다음 날 김정은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장외대회를 통해 일색적인 비난 담화를 냈고, 이어 4일에는 김 위원장이 먼저 코로나19 위로 친서를 보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리지기 5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내자, 7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중대 반응을 경고했고 이날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민지혜 기자 oasie@

△ 부산일보, 3/10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결함이 드러났다 지적했지만 이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래한국당 관련 기사는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본진'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까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정당임을 언론이 용인한 셈이다(<미래한국당 539명 비례 후보 신청…黃, 이번엔 공천 영향력 발휘할까>, 부산일보, 3/11, 6면).

미래한국당 539명 비례 후보 신청 黃, 이번엔 공천 영향력 발휘할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539명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본진'인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공천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통합당 공천에서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작용하지 못했다는 당내 평가를 받았던 터라 더욱 그렇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본격 공천 심사를 앞둔 지난 9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가 사실상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에 해당하는 한국당 공천심사 방향을 논의·협의를 하려고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만남 직후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나 여성 청년 영입인재 중 한 명이 한국당 비례 1번을 받을 것이라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 공관위는 10일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벌써부터 통합당과 무관하게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두 분(황교안·한선교)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는 황 대표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린다"고 했다.

공 위원장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자 최측근 '메신저'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배제 가능성이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는



미래한국당이 10일 국회에서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있을 거다. 그 조건을 보면 국론분열과 계파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보수 통합 '승인'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 황 대표 입장에선 유 변호사 거취가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공천 배제가 기정사실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한편 한국당 공관위는 11일까지 서류심사, 15일까지 면접심사를 마치고 나서 비례후보 순번을 확정한다. 이어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결정한 명단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추인된 명단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다. 한국당은 이 같은 절차를 16일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민지형 기자 oasis@

△ 부산일보, 3/11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 헤드라인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 헤드라인
'꼼수 vs 꼼수' 대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종결자는?(부산일보, 3/10, 8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539명 공천 신청(국제신문, 3/11, 9면)
여당 '비례연합' 참여 수순...12일 당원 투표로 결정(국제신문, 3/10, 8면)	미래한국당 539명 비례 후보 신청...황, 이번엔 공천 영향력 발휘할까(부산일보, 3/11, 6면)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찬반 의견 첨예(국제신문, 3/11, 9면)	PK 올드보이, 미래한국당으로 '우르르'(국제신문, 3/12, 6면)

△ <표3> 3월 2주 지역신문 위성정당 관련 기사 목록

공천 기사 많지만 청년·여성·신인 공천에 관심 없어 가산점 타하는 정치인 발언에 힘 싣기도

3월 둘째 주도 전체 선거 기사 중 공천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1%로 선거 기사 2건 중 1건이 공천 기사였다. 특히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통합당 내 정치인들의 불만을 많이 다뤘다. 제목에 ‘후폭풍’, ‘집안싸움’, ‘부글부글’, ‘사천’이라고 쓰면서 공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주로 전했다.

한편, 경선을 치르게 된 후보자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다 보니 청년, 여성,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부당하다는 논지를 전달하는 기사가 나왔다.

<당 기여도·본선 경쟁력 무시 ‘통합당 경선룰’ 바꿔야> 부산일보, 3/9, 4면

- 당선 가능성과 당심(黨心)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통합당 전현직 PK 원외 위원장들은 ‘총알받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당이 어려운 시절 당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10차례 넘게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에 참가하느라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 통합당 관계자들은 “이럴 바에야 당원 모집을 왜 하느냐”거나 “앞으로는 당협 위원장 맡지 않고 신인으로 남아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 통합당의 한 인사는 “이제 생색내기용 경선은 의미가 없다”며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선 가산점 위력?…‘이번 드라마’ 연출 선거구 나올까> 국제신문, 3/10, 9면

- 이에 대해 이주환 전 시의원은 “여성 배려를 위해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이해하지만,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네 번 출마해 두 번이나 떨어진 기성 정치인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외나무다리’서 또 만났다> 부산일보, 3/12, 4면

- 이번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은 여성 가산점 5%를 받는데, 이는 경선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여성 배려를 위해 가산점을 주는 건 이해하지만,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기성 정치인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당 기여도·본선 경쟁력 무시 ‘통합당 경선룰’ 바꿔야”

100% 일반 여론조사, 신인·여성 가산점
이주환·서범수·나동연 등 불이익 받아
당선 가능성·충성도 적극 반영 목소리



이주환 서범수 나동연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미래통합당의 부산·울산·경남(PK) 경선 과정에서 당 기여도가 높은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해 당선 가능성과 당심(黨心)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 전현직 PK 원외 위원장들은 ‘홍알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당이 어려운 시절 당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10차례 넘게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의집회에 참가하느라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그런데 PK 전·현직 위원장 중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경선대상으로 분류됐다.

더욱이 통합당은 경선 과정에서 당 기여도를 전

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해당(去黨) 행위를 하거나 대외 투쟁과정에서 뒷집진 채 방관한 인사들을 배려하는 분위기다. 전통적인 경선룰인 ‘당원 50%+일반 50%’ 대신 ‘100% 일반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50%+일반 50%’ 방식의 경선을 도입해 당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통합당 관계자들은 “이럴 바에야 당원 모집을 왜 하느냐”거나 “앞으로는 당협 위원장 맡지 않고 신인으로 남아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PK 경선과정에선 당 기여도와 본선 경쟁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충고가 지배적이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 시·도의원, 출마 경력자 등 기성 정치인들 간의 경선에선 ‘당원 50%+일반 50%’의 기존 경선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통합당은 PK 23개 지역구(부산 10, 울산 5, 경남 8)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이들 중 부산 연제(이주환 김희정)와 울산 울주(서범수 장능인), 경남 양산(나동연 박인 이장권) 등 3곳은 똑같은 기성 정치인들이 경선을 벌지만 원외 위원장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곳이다.

우선 부산 연제는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주환 시흥도시개발 대표와 김희정 전 의원이 맞붙는다. 하지만 총선에 네 번 출마해 두 번 떨어져 인지도가 높은 김희정 전 의원은 여성 가산점 5%를 얻는 반면 오랫동안 부산사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 기여도가 높다는 평을 듣는 이주환 전 위원장은 가산점을 전혀 못 받는다.

울산 울주에서도 장기간 울주 당협위원장을 맡아 당무에 적극 참여한 서범수 전 울산경찰청장은 ‘가산점 0’이다. 반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변인을 지낸 장능인 후보는 서 전 청장과 정치활동 기간이 비슷하지만 단지 ‘30세 청년’이라는 이유로 20%의 가산점을 얻는다.

경남 양산에서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나동연 전 양산시장은 가산점이 없지만 양산시의원과 경남도위원을 지낸 박인(59세) 후보는 출마 경험이 없어 신인 가산점 4%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선 원외위원장들에게 경쟁선대와 비슷한 가산점을 주거나 정치활동 경력에 오래된 청년과 여성의 가산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통합당의 한 인사는 “이제 생애 초기 경선은 의미가 없다며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ktk@

△ 부산일보, 3/9

지역 언론의 기사를 종합하자면, ‘본선 경쟁력’과 ‘당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후보의 자질인 셈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지역에서 당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정당인, 후보자의 요구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 30% 공천을 내걸었고 청년과 정치 신인에 대해서도 최대 25% 가점을 약속했다. 또 미래통합당도 정치 썬신을 하겠다며 20%대의 가점을 청년, 여성, 정치신인에게 부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공천 과정을 전하는 기사들은 가산점의 취지와 중요성은 다루지 않고 오히려 가산점을 없애거나 줄이는 식으로 경선 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후보들의 말에 집중했다.

언론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혁신’, ‘쇄신’을 화두로 던지지만, 정작 선거 보도는 기성정치인의 말에 기대어 대부분의 기사를 생산한다. 이번 모니터 기간에도 그랬다. 이는 정치 발전이 일궈낸 룰을 스스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태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후보자 기본 정보	4	1	5
	7.4%	2.4%	5.2%
정책 공약	4	1	5
	7.4%	2.4%	5.2%
후보자 자질	2	2	4
	3.7%	4.8%	4.2%
공천 관련	31	29	60

	57.4%	70.7%	63.1%
선거 전략	3	9	12
	5.5%	21.9%	12.6%
선거 판세 여론조사	28	6	34
	51.8%	14.6%	35.7%
후보 동정	0	1	1
	0.0%	2.4%	1.0%
선거법 관련	0	0	0
	0.0%	0.0%	0.0%
시민 사회 동향	2	0	2
	3.7%	0.0%	2.1%
기타	0	0	0
	0.0%	0.0%	0.0%
합계	74	49	123

△ <표4>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보도 주제

총선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지역 유권자도 정당 투표 합니다.

3월 둘째 주 지역신문의 유익보도 비중은 7.3%였다. 특히 이번 총선은 만 18세 이상 선거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이 바뀌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바뀐 선거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법 관련 보도는 0건이었다.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논란으로만 다뤄졌을 뿐 유권자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한 기사는 없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신진후보나 군소정당에 대한 보도의 중요성이 더 막중해졌음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 역시 0건이었다. 바뀐 선거법에 발맞춰 군소정당에 대한 소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소개 등으로 유권자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제공보도	4	1	5
	7.4%	2.4%	5.2%
비교평가정보 보도	0	0	0
	0.0%	0.0%	0.0%
사실검증여부보도	0	0	0

	0.0%	0.0%	0.0%
시민/사회/여론운동 보도	1	0	1
	1.8%	0.0%	1.0%
신진후보/군소정당 보도	0	0	0
	0.0%	0.0%	0.0%
시민질의논평보도	0	1	1
	0.0%	2.4%	1.0%
시민참여소개보도	0	0	0
	0.0%	0.0%	0.0%
선거법 관련 보도	0	0	0
	0.0%	0.0%	0.0%
합계	5	2	7
	9.2%	9.7%	7.3%

△ <표5> 매체별 4·15총선 관련 유익 보도

거대 양당 대결구도 부각한 국제신문 익명, 따옴표 보도 많은 부산일보

선거보도의 유해성은 △경마성 보도 △가십성/이벤트 중심 보도 △일방 중계 보도 △양방/다방 단순 동시 나열 보도 △양대 정당 중심 보도 △정치혐오성 보도 △전투형 보도 △지역/연고주의 보도 △익명 보도 △따옴표 보도 △오보 △기타까지 12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중복 집계했다.

유익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도는 7.3%에 그쳤던 데 반해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도는 93.6%였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경마성 보도	1	0	1
	1.8%	0.0%	1.0%
가십/이벤트 보도	1	2	3
	1.8%	4.8%	3.1%
일방 중계 보도	0	0	0
	0.0%	0.0%	0.0%
양방/다방 단순 보도	0	0	0
	0.0%	0.0%	0.0%
양대 정당 중심 보도	21	8	29
	38.8%	19.5%	30.5%
정치혐오 보도	5	1	6
	9.2%	2.4%	66.6%
전투/경기 표현 보도	16	3	19

	29.6%	7.3%	20.0%
지역/연고주의 보도	6	5	11
	11.1%	12.1%	11.5%
익명 보도	0	8	8
	0.0%	19.5%	8.4%
다음표 보도	5	7	12
	9.2%	17.0%	12.6%
합계	55	34	89
	101.8%	82.9%	93.6%

△ <표6> 매체별 4·15총선 관련 유해 보도

국제신문은 양대 정당 중심 보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투/경기 표현 보도가 16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양대 정당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전투/경기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총 8건이었다.

8 총선경남지역구판세정명
2008년 3월 12일 목요일 국제신문

현역 빈자리, 흥준표도 떠나고... 불꽃튀는 '조·조 대결'

조성환 "경제회생 책임자"- 조해진 "문재인 정권 심판"

■ 일약의정원안형성
경남시장 출신 민주당 조성환 3선 도전 나선 통합당 조해진 군소 정당-무소속 5명도 제비

일약의정원안형성 선거구는 도는 4백여 지역구다. 현재 유권자는 22만 8000여 명으로 이중 10만 1300여 명, 합동-동맹이 6만 5000여 명, 의원 2만 4000여 명이다.

고원층이 많아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다. 2010년 3선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용수 후보와 새누리당 탈당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조해진 후보가 각각 41.60%와 38.72%를 득표했다. 국민당 단일 후보로 득표율은 3.08%였다.

고대 총선을 지렛대는 여야간의 국외의 원은 할 것 같다. 김용수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11월 10일 1심 판결을 받고 있어 이번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세는 진보 성향의 조선 노동자가 다수인 지역 구설에도 예외는 아니다. 보수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어떤 조합이 이 어질지는 짐작할 수 없다. 특히 김한표(신당)가 출마해 보수 성향에 불만을 품고 있다. 다원계 민주당 경쟁을 받은 김용수도 전 개혁신당(신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명(새누리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명(새누리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명(새누리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세 번째 정면승부 정영훈·박대출 "이번에도 또 너냐"

■ 진주구립
정영훈 경선 통과 본선형 '메트락' 박대출 통합당 공천 필은승 대거 유입-표심 속삭

정영훈 선거구는 예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 후보가 출구권만 30%다. 하지만 지난 들어 민주당의 박대출이 두드러진다. 이 선거구에서 선출될 지역 대표로 박대출과 박대출이 대거 유입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 2석 모두를, 시의원 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박대출 후보가 39%를 얻어 무소속 최기우(27%), 민주당 정영훈(22%)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12 총선에서는 박대출 후보가 54%를 얻어 30%를 얻은 정영훈을 누르고 당선됐다.

컷오프 김한표, 무소속 출마 변수 與도 野도 공천잡음

■ 거제
북 윤상호 공천하자 김해원 반발 통합당 서일중 확정, 김한표 제니 보수-진보-무소속 다자구도 전망

선거구 전체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고향 마리는 양당성을 띠고 있어 이번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세는 진보 성향의 조선 노동자가 다수인 지역 구설에도 예외는 아니다. 보수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어떤 조합이 이 어질지는 짐작할 수 없다. 특히 김한표(신당)가 출마해 보수 성향에 불만을 품고 있다. 다원계 민주당 경쟁을 받은 김용수도 전 개혁신당(신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명(새누리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명(새누리당)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與 하귀남 4전5기 신화쓸까-통합당 경선 승자와 대결

■ 창원 마산합포
하귀남 4전5기 신화쓸까-통합당 경선 승자와 대결

창원 마산합포 선거구는 마산-합포-진해 일대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구에서는 정지 성향이 사뭇 다르다. 성산-여왕구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양면 같은 마산합포구보다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 최근 내셔널 선진화(신당)가 유입되고 있어 보수 성향에 불만을 품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용수 도지사 후보가 46.07%를 얻은 반면 한국당 김대호 후보는 46.07%를 얻은 데 그쳤다. 또 민주당 하귀남 후보가 43.58%를 얻었고, 한국당 정영훈 후보는 33.81% 득표에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귀남 선거구에서 어떤 조합이 이 어질지는 짐작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귀남 선거구에서 어떤 조합이 이 어질지는 짐작할 수 없다.

△ 국제신문, 3/12, 양대 정당 중심 보도

부산일보는 취재원의 신상이나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익명보도가 8건, 제목에서 큰 따옴표 안에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따옴표 보도가 7건이었다.

“지역 민심 심각” 당정에 각 세우는 與 영남 대표선수들

김영춘·김두관·김부겸 선대위원장
‘비례 연합정당 참여 반대’ 한목소리
11일 최고위서 당원 투표 여부 확정
‘코로나 사태’도 민주당에 큰 악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여론이 4월 총선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대표선수들이 최근 정부와 당 지도부를 향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실제 총선 현장에서 제각각이고 있는 지역 ‘비대’ 민심의 심각성이 같은 행보의 배경이 됐다.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10일 민주당이 참여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4·15 총선 민주당 부산·경남·울산(PK)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부산 북갑)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은 “비례 연합정당에 우리 후보를 보낸 미려한국당과 같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라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불리고 해서 참수를 따라하는 것은 민주당 창당 곳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세력이 비례 20석을 차지하고 1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다. “민심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개혁한 선거법의 취지, 민주당 본래의 정신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PK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례 연합정당에 대해 “당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정당”이라며 “사실은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어렵게 보면 위낙 진영 논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중도의 표심이 참 중요하다”며 “우리들이 원칙을 좀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날아갈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대구·경북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비례 연합정당 참여와 관련, “소말대실”이라며 “민주당은 옳은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당”이라고 했다.

영남권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세 사람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가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추기면서 ‘살얼음 판서’로

부산의 한 여론 인사는 “지난해 ‘조국 사태’부터 악재가 쌓이면서 이 지역 총선 여론이 나빠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공급 등에 대한 시민 불만이 증폭되면서 민주당이 ‘특별이한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민중당이 “특별이한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남 청와대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은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10일에도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세계



불어민주당 이석산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례계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제가 이대로 가면 추경만 가지고 급한 불을 끄 것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방

안으로 ‘코로나 채권’이나 ‘상품권 발행’ 등을 제시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11

일 최고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80만여 명에 대한 모차일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부산일보, 3/11